

**국회의원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 진해]**

## **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1호  
TEL:02-788-2103 • FAX:02-788-0136



**방위사업청, FMS 제도이행부실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미국 상업은행 아닌 연방은행 예치해 수익률 저하(1450만달러)  
물자도입전 부당하게 선지급(5466만 달러)**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 제도개선에 대한 미숙한 대응 및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으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가 FMS의 대표적 단점이었던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및 물자대금 선지급(6개월분)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제도개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에도 적용하지 않아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기존에 현금으로만 예치토록 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희망하는 구매국에 한해 국방재무회계본부가 선정하는 미국 상업은행이 발급한 보증신용장(Standby L/C)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04년 1월 FMS 대금도 국방재무회계본부가 선정하는 미국 상업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FMS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1450만 달러를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총 14개 사업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물자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예산의 불용방지 등을 이유로 기존 대금지급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거나 초입금으로 계약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등 모두 5466만 달러를 부당하게 선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08년 10월15일 우리나라의 FMS 구매국 지위가 기존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돼 미국과의 별도협정을 통해 무기 및 기술자료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 등 17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기전력화 및 방산수출 활성화 등 FMS 구매국 지위향상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FMS 구매국 지위상승 효과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FMS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